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참여 광주·전남 학생 751명 확인

보훈처, 광주공립보통학교 281명·나주공립보통학교 174명 등
전국 60개 학교 2596명 학적부 공개…유공자 발굴 속도 낼 듯

일제의 강압적인 수탈, 차별, 불의에 맞서 전국에 항일운동 물결을 일으킨 광주·전남 학생들 751명의 구체적인 항일운동 기록이 학적부를 통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3일 학생독립운동(이하 학생운동) 93주년에 맞춰 전국 60개 학교의 학생운동 참여 학생 2596명의 학적부를 공개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2019년부터 올 10월까지 전국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 및 분석해 학생운동에 동참한 학교와 학생을 발굴했다.

학적부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전국 학생독립운동의 전개 양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훈처 설명이다. 또한 현재까지 전국 학생운동 관련 포상자는 719명에 불과한데, 학적부를 바탕으로 추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학적부 기록상 전남 지역에서는 7개교에서 751명의 학생이 학생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학생은 경남 지역이 14개교 9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6개교 285명, 충북 3개교 235명, 전북 8개교 172명 순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학생운동 최초 발원지인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에서 281명, 광주공립농업학교(광주자연과학고)에서 150명의 참여 기록이 확인됐다.

또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전남여고) 33명, 나주공립보통학교(나주초) 174명, 나주농업보습학교(나주초) 35명, 목포공립상업학교(목상고) 24명, 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전남대 여수캠퍼스) 54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립운동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명예졸업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명예졸업대장은 독립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지난 1949년 전남도지사 승인을 받아 수여하기 시작했다.

보훈처는 명예졸업대장에 학생들의 본적과 이름, 생년월일, 처벌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 학생운동 참가자를 특정하기 쉬웠다고 설명했다. 명예졸업대장은 이전부터 보훈처에서 학생운동 관련 포상·심의를 위해 참조해 왔다.

또 전남 외 지역에서는 서울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가 90건, 부산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동래고등학교) 727건, 부산제2상업학교(개성고등학교) 253건 등 학생운동 기록이 발굴됐다. 학적부 중에는 연희전문학교 학생이 함흥 지역 항일운동인 '함흥학생사건'에 참여한 기록,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이 경남 학도전력증강 국방대회에서 일본인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는 등 '노다이 사건'에 참여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

참여 학생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퇴학,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학생운동 참여자 중 퇴학 처분을 당한 학생이 10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정학을 당한 학생도 565명에 달했다. 유기정학 483명, 훈계 199명, 무기근신 197명, 유기근신 67명 등 징계 사례도 뒤를 이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항일 독립투쟁에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있었다"며 "학적부를 적극 활용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학교와 국가기록원 등과 협력해 추가 학적부 수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3일 광주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 앞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자 서훈 늘려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성명

광주학생독립운동(이하 학생운동) 참여자들 중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받은 사람이 턱없이 적어 정부 차원에서 유공자 발굴 및 서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3일 학생운동 93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독립유공자는 총 1만 7588명이며 이 중 학생운동 관련자는 719명에 불과하다.

기념사업회는 "학생 선열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서훈 추진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념사업회는 또 7년 뒤 찾아오는 학생운동 100주년을 대비해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데 보훈처와 정부 각 부처가 적극 지원해 줄 것, 기념식뿐 아니라 학술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기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학생운동 사적지인 옛 광주역(현 동부소방서)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옛 광주역은 1929년 11월 광주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을 계기로 전국적인 항일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기념사업회는 "현재 광주시내 학생운동과 관련된 건물은 전남여고 본관 한 곳밖에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광주역의 상징성을 감안해 옛 모습을 살려 복원하고 교육·체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광주 각지의 학생운동 참여학교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1103번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학생운동 주역 정해두 '항일운동' 인정

진실화해위, 영광·순창 민간인 89명 희생 사건 등 4건 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3일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정해두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영광과 순창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 3건에 대해 '민간인 89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일 제44차 회의를 열고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사건'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은 광주지역 비밀결사 성진회 활동을 이어 받은 독서회 간부로 선출된 정해두가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도립병원 앞과 향사리의 시장 부근에서 경찰의 제지와 귀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행진을 계속한 사건이다.

정해두는 또한 독서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검거자를 탈환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여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자',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등의 구호를 적은 선전 인쇄물 2000매를 제작하고, 선전 인쇄물을 광주 읍내에 살포하고 시위행진을 했다.

정 씨는 치안유지법 위반, 출판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 형을 받았다.

'영광(불갑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영광군 불갑면 거주 민간인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2월 불갑산 입산자,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광경찰서 및 불갑지서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영광(백수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50년 8~10월 영광군 백수면에서 민간인 62명이 공무원과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경제적으로 부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순창군 주민 13명이 1950년 8월 말부터 1951년 9월 사이에 군인·경찰의 가족, 마을 이장, 대한청년단원 우익단체원이라는 이유로 지방 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해두의 항일독립운동이 인정되므로 '과거사정리법' 제4장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모사업을 지원,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학교·기관 안전점검 철저 당부

광주시교육청이 3일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안전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대비 태세를 선제적으로 갖추도록 이날 공문을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다수 참여하는 다중 밀집 행사 추진 시 주의할 내용을 중심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등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행사 개최 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안전교육 철저,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고 유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등을 포함했다.

행사 추진 시 각종 시설물 사전 안전 기준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